

인도의 2012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과 시사점

송영철 신흥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ycsong@kiep.go.kr, Tel: 3460-1067)

최윤정 신흥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yjchoi@kiep.go.kr, Tel: 3460-1039)

차 례 ●●●

1. 2012년도 예산안 개요 및 의의
2. 부문별 주요 내용
3. 평가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 지난 3월 16일 인도정부는 △ 재정건전화 △ 포괄적 성장(inclusive growth) 적극 추진 △ 성장 추진력 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2년도 예산안을 발표함.
 - 인도정부는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5.1%로 축소시킨다는 재정건전화 목표 아래 조세개혁을 통한 세수확대(22.7% 증가), 보조금 감축(12.2% 감소), 공기업 매각 확대(188% 증가)를 계획함.
 - 한편 포괄적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빈곤층 식량보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산화 작업을 실시하고, 전 국민의 75%에게 식량보조금을 지급하는 식량안보법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음. 그 밖에 교육, 보건, 지역인프라 개발 등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음.
 - 또한 최근의 성장세 둔화(2011년도 성장률은 6.9%로 추정)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의 투자여건 개선, 농업 및 인프라 부문 투자확대, 제조업 육성정책 등을 추진함.
- ▶ 그러나 인도정부의 최대 당면과제인 재정건전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고, 성장추진력을 회복하기에는 예산안에서 발표된 개혁조치들이 제한적이며, 정부의 추진 능력도 의문시되고 있음.
 - 식량, 비료, 연료 부문으로 구성된 보조금 지출은 몬순(monsoon) 강우와 국제 원자재 가격에 의한 변동성이 높고, 전년도 공기업 매각 성과가 목표치의 40%에도 도달하지 못하였음. 더욱이 최근 주요 지방선거 패배와 부패추문 연루로 정치적 입지가 약해진 현 정부가 이를 수행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세제개혁, 연금·은행·보험법 개정, 외국인투자 분야 확대 같은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함.
- ▶ 따라서 기존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은 인도경제의 성장잠재력과 함께 현재 인도경제가 처한 대내외 여건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임.
 - 이번 예산안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확실한 성장 추진력을 제시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2012년도 인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원자재 가격, 유럽 재정위기 같은 대외변수와 몬순에 주의.
 -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인도의 농업, 인프라 부문과 R&D 관련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 단독 또는 민관합동 진출 기회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인도정부가 일부 농업, 철도, 보건, 식품, 전력, 광업, 도로, 항공 관련 기기 및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는 계획을 발표한바, 해당 품목의 수출기회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1. 2012년도 예산안 개요 및 의의

■ 2012년 3월 16일 인도정부는 △ 재정건전화 △ 포괄적 성장(inclusive growth) 적극 추진 △ 성장추진력 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2/13년¹⁾ 예산안을 발표하였음.

- 인도정부는 최근 악화되고 있는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해 2012년도 목표 재정적자 규모를 GDP 대비 5.1%로 축소(2011년도는 GDP 대비 5.9%)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세수확대, 보조금 감축, 공기업 매각을 추진하기로 함.
- 총지출은 전년대비 13.1% 증가한 14.9조 루피(약 3,100억 달러)²⁾로 2011년도(3.4%)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나, 총수입을 간접세율 인상과 공기업 매각 추진 등으로 대폭 늘려서(22.7%) 적자규모를 축소한다는 계획임.

표 1. 2012년도 예산지출 주요 내용

구 분 ¹⁾	2012년도 예산액 (십억 루피)	2012년도 예산액 전년대비 증가율 ⁵⁾	2011년도 예산액 전년대비 증가율 ⁵⁾
총지출(Total expenditure)	14,909	13.1%	3.4%
계획 외 지출(Non plan expenditure)	9,699	8.7%	-0.7%
계획지출(Plan expenditure)	5,210	22.1%	11.8%
중앙정부 계획지출(Central Plan Outlay)	6,515	16.7%	18.0%
농업	177	19.1%	2.7%
농촌개발 ²⁾	408	4.2%	-0.3%
관개 및 홍수관리사업	13	160.7%	36.8%
에너지	1,548	5.2%	23.2%
산업 및 광물	572	41.0%	16.4%
교통 ³⁾	1,254	14.8%	18.4%
통신	154	28.5%	66.5%
과학기술 및 환경	166	30.5%	27.9%
일반경제서비스	248	27.6%	6.2%
사회서비스 ⁴⁾	1,889	20.3%	13.9%
일반서비스	87	57.2%	425.1%

주: 1) 예산안 총지출규모는 계획지출과 계획 외 지출을 합한 금액이며, 중앙정부 계획지출의 경우 계획지출 중 중앙정부 계획지출(Central plan)과 공기업(Public enterprise)을 통해 확보되는 예산을 합친 것임. 계획지출은 계획 외 지출에 포함되는 이자지불, 연금, 일반서비스, 사회서비스, 국방비, 주정부 지원금, 공무원 월급 등 고정지출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임.

2) 농촌지역 주택건설 포함, 도로건설 미포함.

3) 농촌지역 도로건설 포함.

4) 농촌지역 주택건설 미포함.

5) 예산액 증가율은 전년도 수정 예산안 대비 증가율임.

자료: India Budget 2012/13.

- 현 정부가 2009년 재집권을 시작할 때부터 추진해온 ‘포괄적 성장’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 보건, 지역인프라 개발 등 소외계층 지원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였음.
- 한편 2011년도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정부가 추진한 다양한 개혁정책들이 좌절된바, 성장추진력을 회복하기 위해 인프라 및 농업 부문 투자확대, 제조업 육성 등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포함됨.

1) 2012년 4월~2013년 3월간 회계연도를 의미함. 이하에서는 2012년도로 표시.

2) 루피화의 환율은 2012년 3월 27일 기준으로 달러 대비 50루피임.

■ 매년 새로운 회계연도의 시작과 함께 발표되는 예산안은 현재 인도경제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인도정부가 추진할 주요 경제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인도경제를 조망하는 잣대가 됨.

- 수년간 고속성장을 구가하던 인도경제는 최근 세계경기 침체 및 국내여건 악화 등으로 성장세 둔화에 직면하여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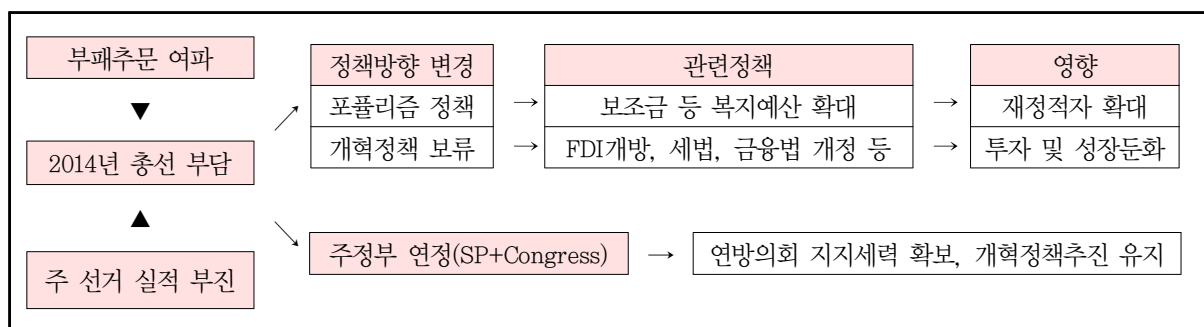
- 2011/12년 3분기(10~12월) GDP 증가율은 최근 2년간 가장 낮은 수준인 6.1%를 기록하였음.
- 2011년 인도의 무역적자는 사상 최대인 1,500억 달러로 추정되며, 재정적자는 세수감소, 보조금 지출 확대 등으로 GDP 대비 5.9%(전년대비 1%포인트 증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예산안은 특히 주요 지방선거 이후 정치적 리더십 변화가 반영된 첫 번째 예산안으로 2014년으로 예정된 총선까지의 정책기조를 가늠할 수 있음.

- 부패추문과 지방선거 패배로 현 정부의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위축된 상황에서 산적한 개혁과제들과 경기부양을 어떻게 추진해나갈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었음.

- 2세대 통신주파수 허가를 둘러싼 정치부패추문으로 국민들의 대정부 신뢰가 하락하였음.
- 지난 3월 초에 발표된 5개 주 지방선거 결과,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UP 주 총선³⁾에서 집권당인 인도 국민회의당(Indian National Congress)은 지역정당인 SP에게 224:28로 참패하였고, 그 밖에 편잡, 우타르칸드, 고아에서도 다수당을 차지하는 데 실패함.

그림 1. 주 지방선거 후 현 연방정부의 정책변화 가능성 및 영향 예상



자료: 현지 정부 발표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3) 인도의 28개 주 중에서 UP는 인구 2억 명으로 인도 인구의 12%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UP 주 선거는 전통적으로 인도 총선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로 간주되어 옴.

2. 부문별 주요 내용

가. 재정건전화

■ 조세개혁을 통한 세수확대

- 직접세 중에서 개인소득세 면제를 확대하는 대신 물품세(excise tax)와 서비스세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수를 전년대비 19.5% 증대한다는 목표를 세움.

표 2. 조세제도 개편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세수 변화*
직접세	- 개인소득세 면세 범위를 기존 18만 루피에서 20만 루피 이하로 확대 - 전력, 항공, 도로, 항만 등 인프라 부문의 대외상업차관에 대한 원천세 (withholding tax)를 기존 20%에서 5%로 3년간 인하 - 증권거래세(securities transaction tax)를 기존 0.125%에서 0.1%로 인하	법인세 13.9% 증가 소득세 13.9% 증가
간접세	- 서비스세, 물품세율 인상(10% → 12%) - 농업, 광업, 인프라 관련 설비 및 기기 등에 대한 관세 인하	물품세 29.1% 증가 서비스세 30.5% 증가 관세 2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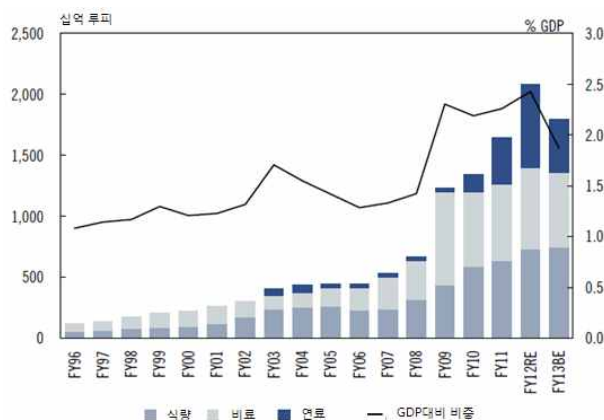
주: * 2011년 대비 세수(Tax Collection) 증가율임.

자료: India Budget 2012/13.

■ 보조금 감축 및 공기업 매각

- 인도정부는 식량, 비료 및 연료 부문에 할당된 보조금 예산을 전년대비 12.2% 감축시켜 GDP 대비 보조금의 비중을 2% 이하(1.9%)로 유지할 계획임.
- 식량부문 보조금 규모는 전년대비 3%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비료와 연료 부문의 경우 각각 전년대비 9.2%, 36.4% 감소함.
- 예산안에서 보조금이 감축된 것은 2005년도에 전년 예산안 대비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처음임.

그림 2. 2012년 예산안 보조금 추이 및 구성변화



자료: 인도 재무부

(단위: 10억 루피)

연도	식량	비료	연료	총	증가율
2006	240	262	27	571	20.2
2007	313	325	28	709	24.2
2008	438	766	29	1,233	82.9
2009	584	613	150	1,347	9.0
2010	638	623	384	1,645	22.7
2011	728	672	685	2,085	24.7
2012	750	610	436	1,796	-12.2

자료: India Budget 2012/13.

표 3. 공기업 지분매각 추이

(단위: 십억 루피)

구분	2006/07년	2007/08년	2008/09년	2009/10년	2010/11년	2011/12년	2012/13년(계획)
지분매각 금액	5	388	6	241	228	155	300

주: 2012년도를 제외한 이전 회계연도의 지분매각 금액은 실제 매각된 금액임.

자료: India Budget 2012/13.

- 한편 인도정부는 2012년 공기업 매각규모를 전년도 매각규모 대비 188% 증가한 3,000천억 루피로 계획함.
- o 2011년 실제 공기업 매각규모는 당초 계획했던 4,000억 루피에 크게 못 미치는 1,550억 루피에 그침.

나. 포괄적 성장

■ 식량 공공분배시스템 개선과 식량안보법안 상정 추진

- 인도정부는 빈민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보조식량의 배송, 분배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공공분배시스템(PDS: Public Distribution System)의 전산화를 추진함.(2012년 12월 실시 계획)
- o PDS는 빈민층에 대한 식량보조 프로그램으로 각 주정부에의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o 주정부는 Fair Price Shop이라는 공급 네트워크를 통해 밀, 쌀, 설탕 등을 저가에 제공하고 있으나 인도 빈민층의 식량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그 수가 부족한 실정임.
- o 또한 식량이 배송, 분배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고 실제 수혜대상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전산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또한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식량안보법안(National Food Security Bill)의 국회상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임.
- o 국가자문회의(The National Advisory Council)에 의해 제안된 이 법안은 2013년도까지 전체 인구의 75%가 식량보조금 혜택을 받도록 하는 등 보조금 대상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재정적자 가중 문제 및 대규모 식량조달의 현실적 어려움 등으로 보류되어 왔음.

표 4. 농촌개발 대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농촌 시설 개선	- 농촌 식수 및 위생시설 개선을 위해 1,400억 루피 배정(전년대비 27% 증가)
농촌고용보장 대책(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Scheme)	- 농촌지역 고용확대를 위해 약 3,300억 루피 배정
개발펀드 조성	- 농촌인프라 개발펀드에 2,000억 루피 배정 - 동북부 지역 등 소외지역을 위한 개발펀드에 약 1,200억 루피 배정(전년대비 22% 증가)

자료: India Budget 2012/13.

■ 농촌을 비롯한 소외지역 개발과 취약계층 지원 확대

- 농촌의 식수 및 위생시설 개선을 위해 전년대비 27% 증가한 1,400억 루피의 예산을 배정함.
- 농촌인프라 개발펀드와 인도 동북부 등 소외지역 개발을 위한 펀드에 각각 2,000억, 1,200억 루피를 배정함.
- 또한 학교 교육 및 보건 등 복지부문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보건서비스를 강화함.

표 5. 취약계층 지원내용

구분	주요 내용
아동개발서비스*	- 아동개발 지원에 약 1,580억 루피 배정(전년대비 58% 증가)
하층카스트지원	- 하층 카스트 지원 부문에 약 3,700억 루피 배정(전년대비 18% 증가)
교육지원	- 초등·중등교육 부문에 약 2,600억 루피 배정(전년대비 21.7% 증가)
보건지원	- 소외지역의 보건서비스 강화를 위해 2,100억 루피 배정(전년대비 약 15% 증가)

주: * 6세 미만 아동의 영양 및 보건상태 개선을 통해 영아 사망률, 영양실조를 감소시키고 아동의 부모에게 아동교육 및 보건, 영양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모들의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임.

자료: India Budget 2012/13.

다. 성장 추진력 회복

■ 외국인투자 개방 및 환경개선

- 인도정부는 외국인투자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2012년 금융법안(Financial Bill)에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를 도입하여 국제거래에 대한 세무 불확실성을 낮추고자 함.
 -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는 국내 본사와 해외 자회사 간에 향후 적용할 거래가격 수준을 과세당국과 미리 합의(이전가격 사전 합의)하는 제도로서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향후 세무분쟁 등의 위험소지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 기업공개(IPO)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적격 외국인개인투자자(QFIs: qualified foreign investors)가 직접 인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함.
- 소매유통업 부문 신규 투자자에 대해 3년 동안 50%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제공하기로 함.
 - 신규투자자의 조건은 5만 루피 이상의 지분투자에 한하며, 연간 소득이 100만 루피 이하여야 함.
- 이 밖에 수년간 지연되어온 은행법, 보험법, 연금법안의 지속적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 인도정부는 보험(현재 26% 허용), 연금 부문(투자제한)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 확대, 외국인투자자의 은행 의결권 확대(현재 10%), 외국은행의 인도 내 신규 개설 지점 수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표 6. 투자환경 개선 및 관련 법안 정책

구분	주요 내용
투자환경 개선	-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 도입 - 소매유통업 부문 신규 투자자 혜택 제공(Rajiv Gandhi Equity Savings Scheme) - QFIs의 인도 주식시장 직접투자 허용
관련법안 수정	- 은행법, 보험법, 연금법안의 지속적 개정

자료: India Budget 2012/13.

■ 농업부문 투자 및 지원 확대

- 농업부문의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농업발전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확대함.
- 농업개발계획(RKVY: Rashtriya Krishi Vikas Yojana)에 전년대비 약 18% 증가한 920억 루피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인도 동부지역의 녹색혁명(BGREI: Bringing Green Revolution to Eastern India) 프로그램에는 150% 증가한 100억 루피를 배정함.
- 농업 종사자에게 전년대비 1조 루피 증가한 5조 7,000억 루피의 금융지원을 하고, 대출에 대해 3%의 추가 금리할인을 계획함.
- 식품가공시설 및 물류시스템 등 식품가공 부문 개선을 위한 중앙·주정부 간 협력프로그램(National Mission on Food Processing)을 추진하기로 함.

표 7. 농업부문 투자정책

구분	주요 내용
농업발전 프로그램 지원	- RKVY 프로그램¹⁾에 920억 루피 지원(지난해 250억 루피) - BGREI 프로그램²⁾에 100억 루피 지원(지난해 40억 루피) - 관개시설 부문에 30억 루피 지원
금융지원	- 농업부문 대출규모를 5조 7,000억 루피로 확대 - 농업종사자에 대한 대출금리 할인 3% 추가지원(현재 7%)
농업 인프라 개선	- 식품가공시설 및 물류부문 개선 프로그램(National Mission on Food Processing) ³⁾ 추진

주: 1) RKVY(Rashtriya Krishi Vikas Yojana)는 인도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농업발전 프로그램의 하나로 중앙정부가 인도 각 주정부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주정부의 농업부문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2) 2010~11년도에 처음 도입된 BGREI(Bringing Green Revolution to Eastern India)는 RKVY의 보조 프로그램으로 아쌈, 비하르, 오리사, 자르칸드, 차티스가르 등 인도 동부지역 주들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함.

3) 이 사업은 열악한 식품가공시설 및 저장시설, 물류시스템 미비로 인한 채소, 과일, 곡물 등의 손실을 막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주정부는 가공 및 저장시설을 담당하고 중앙정부는 물류부문을 담당하는 협력프로그램임.

자료: India Budget 2012/13.

■ 인프라 부문 투자확대

- 12차 경제개발계획 기간 중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를 50조 루피(약 1조 달러)로 확대하고 프로젝트에 원활하게 자금이 투입되도록 자금조달 시스템을 개선함.
- 인도의 5개년 경제개발계획은 1951년에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12차 경제개발계획 기간은 2012~17년까지임.
- 인도정부는 민간 금융기관들과 민관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형태의 인프라 채권펀드(Infrastructure Debt Fund)를 조성, 초기 자금으로 800억 루피를 배정함.

- 인도정부는 2012년 3월 5일 ICIC 은행, 씨티그룹(City Group)과 최초로 민관협력 형태의 인프라 채권펀드를 조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프로젝트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인프라 프로젝트 부문에 6000억 루피 규모의 비과세채권 도입을 허용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전력 프로젝트에 대해 재융자를 목적으로 한 대외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함.
- 인도정부는 회사당 연간 ECB 규모를 7억 5,000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ECB 규모를 10억 달러로 확대해 달라는 인도 전력부의 요청을 거절한 바 있음.
- 또한 인프라 개발과 관련하여 세제혜택을 확대함으로써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표 8. 인프라 부문 투자확대정책

구분	주요 내용
예산 확대	- 인프라 개발부문에 50조 루피 배정
자금조달 시스템 개선	- 인프라 개발사업을 위해 6,000억 루피 규모의 정부 비과세채권 발행 허용 - 현재 진행 중인 전력 프로젝트에 대해 재융자(re-finance)를 목적으로 한 ECB를 허용
세제혜택	- 전력, 항공, 도로, 항만 등 인프라 부문의 ECB에 대한 원천세(withholding tax)를 기존 20%에서 5%로 3년간 인하 - 인프라 개발 자회사 및 특수목적법인(SPVs)에 대해 배당세(dividend distribution tax) 감면

자료: India Budget 2012/13.

■ 제조업 활성화 정책 추진

- 인도정부는 현재 GDP의 16%인 제조업의 비중을 10년 내 25%까지 확대하고, 일자리 1억 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제조업 정책(National Manufacturing Policy)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 제조업 정책은 2011년 10월에 내각 승인을 받은 상태임.
- 또한 R&D 부문 지출비용의 200%까지 세금을 가중공제(weighted deduction)하는 혜택을 2017년까지 연장하여 R&D 부문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함.
- 당초 R&D 부문 지출에 대한 세금인하 만기는 2012년 3월 31일까지였으나 자동차, 제약 부문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의 요청으로 연장됨.

3. 평가 및 시사점

가. 예산안 평가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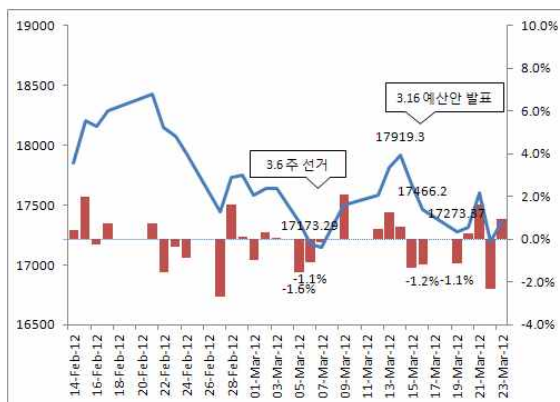
- 재정건전성은 포괄적 성장과 더불어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핵심 정책과제로 이번 예산안에서도 세수확대, 보조금 감축, 민영화 확대라는 실천계획을 제시하였으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됨.

- 세금인상으로도 늘어난 재정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물가부담만 가중시킬 가능성도 있음.
- 식량보조금은 전년도에도 예산액을 초과하여 지출하였으며, 비료와 연료보조금 역시 국제 원자재 가격 및 환율변동에 좌우되므로 불확실성이 큼.
- 공기업 지분매각을 통해 조세 외 수입을 30%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나, 2011년도의 경우 매각규모가 1,550억 루피로 당초 계획했던 4,000억 루피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비조세 수입확보도 쉽지 않음.

■ 글로벌 투자기관들도 재정적자 축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임.

- 무디스, 골드먼 삭스, HSBC 등 글로벌 투자기관들은 인도정부의 재정적자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보조금 감축 및 공기업 매각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전망함.
- 예산안이 발표된 3월 16일 인도증시는 전일대비 1.2% 하락하였으며 3월 17일에도 전일대비 1.1% 감소함.

그림 3. 증시 변동추이 및 평가



자료: <http://www.bseindia.com>

기관	평가 및 전망 내용
무디스	- 재정적자 우려
골드먼 삭스	- 재정적자 우려
노무라	- 2011년 재정적자 확대예상(6.1%)
Standard Chartered	- 보조금 감축 실천에 부정적
RBS	- 보조금 감축 실천에 부정적
HSBC	- 보조금 감축 실천에 부정적
City	- 보조금 감축 실천에 부정적

자료: 각 기관 발표 자료를 참고함.

■ 이번 예산안은 인도정부가 2014년 연방총선을 의식하여 성장 중심의 개혁정책보다는 보조금 및 복지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복지 중심의 포퓰리즘 정책에 무게를 둔 것으로 평가됨.

- 세제혜택 확대, 자금조달 제한 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도 일부 포함되었지만, 세제개혁, 연금법·은행법·보험법 개정, 소매유통시장 개방 등 주요 개혁개방 정책 추진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음.
- 2012년 3월 주(지방) 선거 패배 및 부패 스캔들로 인한 정치적 입지 위축이 현 정부가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⁴⁾
- 나아가 연합정권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2014년 총선까지 개혁적인 정책보다는 포퓰리즘적 정책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4) 선거 결과 발표 후 골드먼 삭스, Standard Chartered, BoA 및 언론기관들은 현 정부가 주 선거에서 참패함에 따라 개혁정책 추진이 지연되거나 정치적으로 덜 민감한 정책 위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 바 있음.

표 9. 부문별 예산안 평가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구체적 목표 제시 - 세수증대 및 보조금 감축 계획 ■ 성장유지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 - 인프라 부문 자본조달 환경개선 및 세제혜택 확대	■ 재정건전성 실현 불확실성 - 보조금 확대 우려 - 민영화 목표 달성의 불확실성 ■ 개혁개방 정책의 구체성 부재 - 세제개혁 및 각종 법안 처리의 지연 ■ 물품세, 서비스세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자료: *Economic Times, Coty group, Standard Chartered* 등의 의견을 종합, 분류하였음.

■ 인도정부는 예산안에서 2012년도 인도경제가 7.6%(±0.25%)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정부 전망치가 달성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인도정부는 2011년도 GDP 성장률이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산업생산 저하로 6.9%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2012년에는 7.6%, 2013년에는 8.4%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함.
- 그러나 인도정부가 예산안에서 제시한 재정건전화의 달성 가능성이 낮고, 구체적인 개혁개방 정책이 부재한 점 등을 근거로 대부분의 경제전망기관들은 2012년도 인도경제의 성장전망치를 6.9~7%로 하향 조정함.

표 10. 기관별 인도경제성장률 전망

기관	2012년 성장률 전망		2011년 성장률 추정	
	전망치	전망일	추정치	추정일
인도정부	7.6%	2012년 3월 16일	6.9%	2012년 3월 16일
모건스탠리	6.9%(기존 7.4%)	2011년 11월	7.4%(기존 7.8%)	2011년 8월
IMF	7%(기존 7.8%)	2012년 3월	8.2%	2011년 3월
EIU	6.9%	2012년 3월	7.2%	-

자료: 각 기관 발표자료 종합.

나. 시사점

■ 기존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은 인도경제의 성장잠재력과 함께 현재 인도경제가 처한 대내외 여건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임.

- 이번 예산안에서 인도정부가 늘어나는 재정적자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확실한 성장 추진력을 제시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2012년도 인도경제 전망에서 대외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이 보다 커짐.
 - 2011년 10%를 넘어섰던 도매물가 상승률이 2012년 3개월 연속 6%대로 진정됨에 따라 인도정부가 금리인하에 적극 나설 경우 목표했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거나 몬순 강우량이 저조하여 농업생산이 감소할 경우,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가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에는 2012년에도 6%대 성장에 머물 수 있음.

■ 특히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인도의 농업, 인프라 부문과 R&D 관련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이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 단독 또는 민간합동의 진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식품가공시설 및 물류시스템 등 식품가공 부문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National Mission on Food Processing)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냉동·냉장, 저장시설, 물류센터 부문에 대한 진출 기회 확대가 예상된다.
 - 또한 지난해에 이어 인프라 부문에 대한 예산을 인상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 우리 기업은 단독 또는 정부와 연계한 민관합작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인프라 개발예산을 확대하고 자금조달 규제 완화 및 세제혜택을 개선함에 따라 인프라 개발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인도정부가 처음으로 민간 금융기관들과 민관협력 형태의 인프라 채권펀드를 조성하여 자금조달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임.
 - 만모한 싱 총리는 3월 25일 한·인도 정상회담 시 2012~17년간 인도정부가 추진하는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발계획을 설명하고, 한국기업들이 인도에서 착공되는 고속도로·항구·공항·지하철·발전소 건설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R&D 지출비용에 대한 세금공제 폭이 2017년까지 200%로 확대되므로 인도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현지 연구개발을 보다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음.
 - Standard Chartered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인도의 자동차, 제약 산업 R&D 부문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함(Standard Chartered, "India Budget 2012-13," 17 March 2012).
- 한편 인도정부가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이를 해당품목의 수출확대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인도정부는 일부 농업 및 철도 관련 기기, 보건 및 식품 관련 제품에 대해 기본관세를 인하하였으며, 일부 전력·광업·도로·항공·환경 관련 기기 및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폐하거나 무관세 적용기간을 연장함.

표 11. 주요 관세인하 품목 및 내용

부문	품목	관세혜택 내용
농업	농업기기 및 그 부품	기본관세 인하(7.5%→2.5%)
	비료프로젝트(Fertilizer Projects)를 위한 설비	기본관세 철폐(2015년 3월 31일까지)
석탄	기관용 석탄(Steam Coal, HS코드 27011920)	기본관세 철폐(2014년 3월 31일까지)
천연가스	전력발전을 위한 연료(LNG, 천연가스)	기본관세 철폐
광업	석탄채굴 프로젝트(Mining project)를 위한 설비	기본관세 철폐
철도	철도안전관련 기기, 레일설치 기기	기본관세 인하(10%→7.5%)
도로	터널 공사(굴착기) 관련 기기	기본 및 추가관세 철폐
항공	비행기 부품, 수리 관련 부품 등	기본 및 추가관세 철폐
제조업	철강, 섬유, 의류, 의료기기	관세인하 및 철폐
보건 및 식품	콩 제품	기본관세 인하(30%→10%)
	요오드	기본관세 인하(2.5%로 인하)
	활생균(probiotics)	기본관세 인하(10%→5%)
환경	태양열프로젝트 관련 기기	관세철폐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량, 배터리팩	기본 및 추가관세 철폐 또는 인하

자료: India Budget 2012/13, <http://indiabudget.nic.in/ub2012-13/cen/cusexplanatory.pdf>.